

PROGRAM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5:40-16:00	등록 및 안내	
16:00-16:05	개 회 식	사 회
16:05-16:10	좌장인사 및 소개	사 회
16:10-16:30	<div>주 제 발 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제 : 충남 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양현미 I 상명대학교 교수 	
16:30-17:45	<div>종 합 토 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강현수 I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 지정토론자 9인 변재란 I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정섭 I 충남역사문화원 원장 전성환 I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최인호 I 청운대학교 교수 김교빈 I 호서대학교 교수 진종현 I 공주대학교 교수 최정한 I (사)공주문화센터 대표 이성우 I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 이인배 I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 장
17:45-18:00	종합정리	
18:00	폐회	
18:00~	만찬	

충남 문화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양현미(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Ph.D)

충남 문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변적인 위상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정부나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문화가 실제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 지지지는 못했다. 문화에 대한 정부투자 규모가 정부 예산의 1%를 달성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그나마 문화의 국가적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 문화예산은 1%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산 2%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점은 문화계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화융성과 함께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문화가 갖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지자체에 고르게 돌아가게 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 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문화재정 구조를 감안할 때, 충남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충남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충남 유교문화원 설립,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과 같은 몇 가지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대응이 눈에 띈다. 하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눈앞에 도래한 다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도 충남의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어서 필자의 이러한 우려는 조만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향후 충남 문화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문화정책

현 정부의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문화유산이나 문화산업에 비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과제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시대적 과제인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이

루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대두된 정책영역이 생활문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보급으로 대표되는 문화복지 정책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국민 모두가 문화를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생활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배우고 아마추어로서 창작활동을 하며 문화동아리를 통해 함께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문화시설로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전국적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등과 같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과 같은 전문문화시설의 보급은 시군 단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문화를 생활화하기에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충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4대 문화시설의 보급률은 전국 6위이지만, 문화시설의 운영수준과 도민의 이용률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충남 서남부가 동북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도농간 격차가 크며 통상 정부 정책에서 소외계층으로 분류하는 농어촌주민이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도민도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소외계층이다. 그러나 충남에서 이들은 소외계층이 아니라 생활문화정책의 주 계층이다. 그렇다면 과연 농어촌에서,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생활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충남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모델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충남의 문화현실에 대한 솔직한 성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문화시설 운영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서 생활권 문화환경의 조성까지 문화가 흐를 수 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2. 지역 문화전달 체계 개편

생활문화정책이 문화예술의 향유 쪽을 대표하는 정책이라면, 문화예술 공급과 관련한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는 지역 문화전달 체계의 개편이다. 문화부의 경우, 하고 싶은 정책은 많은데 예산이 작다보니 자잘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로 이전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화전달 체계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1,600여개에 이르는 지원사업을 1,000개 이하로 줄이는 재정재출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광역문화재단으로 문화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재생 등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이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경우, 광역문화재단은 더이상 문예진흥기금의 분배통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나 기초문화재단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서 광역 단위의 종합적 문화예술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이 변화하게 된다. 현 상황은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과

같은 기존 광역문화재단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큰 폭의 빠른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충남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충남문화재단에 요구되는 위상과 역할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정신문화정책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부각되는 또 하나의 정책영역은 그동안 문화정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신문화정책이다. 정신문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나는 인문학을 문화정책 차원에서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문학 관계자와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별도로 가질 정도로 이 분야는 새로운 문화정책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을 포함한 기존의 문화시설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요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한국학을 포함하는 민족문화정책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은 문화유산정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정책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충남의 경우,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과 충남학이 이 맥락에 닿아 있으며 인문학과 도서관, 독서모임을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무형문화유산정책

새 정부의 문화유산정책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정책영역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무형문화유산정책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산업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통문화산업정책이다. 이들은 근거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거나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형문화유산정책과 관련하여 충남을 살펴보면,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 부여 고도보존사업, 백제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내포문화 유적 정비 등 주로 유형문화유산에 치중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충남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내포문화권 복원 및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충남을 대표하며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전통문화산업정책

전통문화산업정책은 현재 전통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전통문화산업정책은 문화부와 문화재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추진해온 한스타일사업과 전통문화사업,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활용과도 관련되어 있다.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정책 차원에서 문화원형 콘텐츠산업으로 일부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미디어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산업정책에 비하면 미약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통문화산업정책이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분리되고 관련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될 경우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서 자원이 풍부한 충남의 입장에서는 문화산업정책의 활로가 될 수 있다.

6. 창조경제로서 문화콘텐츠산업정책

지난 6월 범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개념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과학기술과 ICT 정책이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창조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창작과 창업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융자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여전히 미디어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의 진흥방향을 살펴보면,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한국형 디지털 테마파크(가칭) 조성 추진,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다소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융복합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로서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각 분야별로 해당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충남 테크노파크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예시

분 야	주요 과제(예시)
비타민 A(농업)	○ 농작물/축산물 생육 관리 (센서, 빅데이터)
비타민 C(문화)	○ 관광·문화·지역 정보 연계 서비스 (QR코드, 증강현실, 3D 영상)
비타민 F(식품)	○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식품유통이력 및 식품안전관리(RFID, 스마트 단말, 앱)
비타민 I(인프라)	○ LTE 기반 지능형 철도,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한국형 GPS 위성항법 등
비타민 S(안전)	○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사고, 재난경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GPS, 센서, 앱)